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①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②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③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④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⑤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⑥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

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 다음으로, 탄핵소추 사유에 관하여 판단하겠습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① 위험적인 계엄 선포 및 시행, ② 국회에 대한 불법적인 군대 투입, ③ 위험적인 포고령 발령,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불법적인 압수·수색 시도, ⑤ 위법적인 법조인 체포 지시 등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합니다.

1. 위험적인 계엄 선포 및 시행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겠습니다.

가. 인정 사실

피청구인은 2024. 12. 3. 00:00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사령관으로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하였습니다. 계엄선포의 이유는 ‘최근 급격한 사회 불안과 혼란으로 인하여 헌법질서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계엄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부는 ① 집회·시위 금지, ② 언론·출판·방송·통신에 대한 검열, ③ 휴교령, ④ 주요 기간시설 및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군 병력 배치 등의 내용을 담은 포고령을 발령하였습니다.

계엄 시행 이후 군 병력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주요 국가기관과 주요 언론사, 방송국 등에 배치되었고,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이 통제되었으며, 일부 언론사의 보도가 검열되기도 하였습니다.

나. 판단

헌법 제77조 제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사회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엄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선포되어야 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 유지가 어려울 정도의 상황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일부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있었으나, 이는 통상적인 정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계엄 선포 절차에 있어서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부서가 없었고, 계엄의 시행 일시, 지역, 사령관 등을 구체적으로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하지 않은 등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계엄 선포는 헌법 제77조 제1항 및 계엄법에 위반되는 위헌적인 행위라고 판단합니다.

2. 국회에 대한 불법적인 군대 투입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겠습니다.

가. 인정 사실

계엄 시행 이후, 헬기, 군용차량, 총기로 무장한 군대와 경찰 병력이 국회에 투입되어 국회의사당 본관과 의원회관 주변을 점거하였습니다. 군경 병력은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국회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는 국회의원들을 폭행·위협하였습니다.

나. 판단

국회는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헌법기관으로서 법률 제정권, 예산 심의·확정권, 국정 감사·조사권 등 중요한 권한을 행사합니다.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정 활동은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요소입니다.

헌법 제46조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군경 병력을 국회에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폭행·위협한 행위는 국회의 권한 행사를 심각하게 방해하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및 불체포특권을 침해한 위헌적인 행위라고 판단합니다.

특히, 헌법 제77조 제5항은 “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회에 지체 없이 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계엄법 제10조 제1항은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 것으로

헌법의 관련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3. 위헌적인 포고령 발령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겠습니다.

가. 인정 사실

계엄사령관은 계엄 선포와 동시에 ① 모든 집회·시위의 금지, ② 신문, 방송 등 언론·출판물의 검열, ③ 정당 및 정치단체의 정치 활동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포고령을 발령하였습니다.

나. 판단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2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엄 하에서도 국민의 기본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포고령을 통해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제한은 불가피하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사건 포고령은 집회·시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정당 활동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회 불안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포괄적인 제한은 그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합니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불법적인 압수·수색 시도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겠습니다.

가. 인정 사실

피청구인은 계엄 시행 이후 군 병력을 동원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요 정당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그 이유로 ‘지난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선거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나. 판단

헌법 제114조 제1항은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헌법에 근거한 독립된 기관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적법한 절차와 근거 없이 군대를 동원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과 정당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한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법치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행위라고 판단합니다.

5. 위법적인 법조인 체포 지시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겠습니다.

가. 인정 사실

피청구인은 계엄 시행 이후 정부 비판적인 성향의 변호사, 법학교수 등 법조인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체포를 지시하려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이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사회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 판단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조인의 독립성과 자유로운 활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국민의 기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법학교수는 법학 연구와 교육을 통해 법치주의 발전에 기여합니다.

적법한 근거 없이 정부 비판적인 법조인들의 위치를 확인하고 체포를 지시하려 한 행위는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법적인 행위라고 판단합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의 핵심 가치인 적법절차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 결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①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 및 시행, ② 국회에 대한 불법적인 군대 투입, ③ 위헌적인 포고령 발령,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불법적인 압수·수색 시도, ⑤ 위법적인 법조인 체포 지시 등 헌법과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이러한 위헌·위법 행위는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매우 중대합니다. 피청구인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야 할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명백히 저버렸으며, 국민의 신임을 심각하게 배신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53조, 제65조, 헌법재판소법 제57조 등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통하여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 질서를 유지할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